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8~9면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전망을 말한다 10면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하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11면
기독교 우파는 어떻게 공화당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됐는가 온라인 기사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16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제국주의와 민족 자결권
6~7면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른다 3면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4~5면

미 연방대법원,

낙태권, 탄소배출 규제 위헌 판결

미국에서 우익이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 주다

한국의 대중도 경각심 가져야

관련 기사 8~10면



보안경찰, 진보 출판사 또 압수수색

표현의 자유 공격 중단하라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옛 보안수사대) 경찰들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자서전 《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 사무실과 인쇄소, 출판사 대표(김승균)와 직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국가보안법 제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다(이적표현물 출판). 《세기와 더불어》는 김일성의 항일독립운동 회고록으로 법원과 공안당국은 진작 이 책을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해 왔다.

지난해 이 책이 출간돼 온라인 서점에서 판매를 시작하자, 우파 단체들이 법원에 이적표현물이나 책의 판매·배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그러나 이 신청은 1심부터 올해 1월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됐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에 따르면, 1심 재판부는 ‘이적표현물이란 사정만으로 책 유통이 금지돼선 안 된다’고 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일반인들이 책 내용을 맹목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들었다.

대법원이 판매를 허용했지만, 재출간 준비를 하자마자 경찰은 다시 압수수색을 벌인 것이다. 경찰은 지난해 5월에도 김승균 대표와 출판사 등을 수색하고 책을 압수했었다.

이번 압수수색 사실을 최초 보도한 <민플러스>에 따르면, 구매자 명단도 압수수색 대상에 있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은 경찰이 지난해 책 구입자의 통장까지 뒤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도서 출판을 이유로 여든이 넘는 김승균 출판사 대표를 일 년 새 두 번이나 압수수색하며 괴롭히는 것이다. 이런 괴롭힘과 구매자까지 처벌될 수 있다는 압박을 통해 경찰은 대법원 판결을 사실상 무력화해 판매 금지를 유지하려는 듯하다.

<오마이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 형사들은 대법원 판결을 들어 압수수색에 항의하는 출판사 측에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고 답했다고 한다.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다는 말다운 답변이다.

7월 4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법원 판단을 위배하는 경찰이 ‘독립성’ 운운하고, 윤석열



신념을 표현할 자유 김승균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일성 회고록 출간은 남북 화해 운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이 입만 열면 자유민주주의 운운해 온 위선을 규탄했다. 이들은 이번 압수수색이 윤석열 정부의 공안통치 신호탄일 수 있다고 경고하고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했다.

표현의 자유

시중 서점에는 히틀러 자서전, 전두환·노태우 회고록(특히 전두환 회고록은 1980년 광주 진압 관련 허위 사실과 비방을 담고 있어 소송 대상이 됐다), 온갖 전쟁광·연쇄살인범의 행적이나 심리를 다룬 도서들이 버젓이 출판된다.

2심 선고처럼 보통 사람들이 책의 내용을 읽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판단이 더 자주적이 되려면 더 많은 표현과 토론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

그런데 경찰·검찰이 김일성 회고록을 출판조차 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가 검열권으로 보통 사람들의 독립적 판단 능력을 국가가 대신하겠다는 것이니, 실은 그것을 인정치 않는 것이다. 국가보안법이 머릿속 생각을 재단하고 처벌하는 희대의 악법인 이유다.

그렇다면 국가보안법은 어떤 사람들의 생각을 단속하는가?

민주당 출신 대통령들만이 아니라 박근혜, 재벌, 우파 언론 사주들도 김정일-김정은 등을 만나서 선물과 덕담을 주고받으며 경제 협력 등을 논의했었다. 그리고 실제로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

광으로 남북 협력을 진행하기도 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장 이후락도 김일성을 직접 만나 비밀 회담을 했고, 노태우 정부도 비밀 회담을 거쳐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으며, 이명박도 김정일과 남북정상회담을 하려고 뒤통수 거러를 시도했었다. 이런 행위 어느 것도 국가보안법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피억압 대중의 남북 자유왕래(요구)나 북한 관련 표현·출판은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행위가 된다.

결국 국가보안법은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서 혜택을 입고, 이 체제의 본질적인 지속을 바라는 사람들과 이 체제를 급진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을 구분한다.

고로 국가보안법은 체제 수호를 위한 계급 차별 악법이다. 바로 그 때문에, 북한 국가가 아니라 국제 노동계급을 이롭게 하려는 실천을 하는 혁명적 반자본주의 좌파들도 이 법의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 돼 온 것이다. 이들의 실천을 이적행위로 처벌할 때, 국가는 스스로 노동계급의 적임을 인정하는 셈이다.

그러나 노동계급 대중에게는 출판과 토론의 자유를 통해 정치 의식을 스스로 발전시킬 자유가 있어야 한다.

윤석열의 경찰

한편, 장경욱 변호사는 6월 30일(압수수색과 같은 날) 북한 귀향을 요구해

온 탈북민 김련희 씨가 경북경찰청 안보수사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관련 참고인 소환장을 받았다고 밝혔다.

안보수사대의 최근 움직임들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경찰·검찰·국정원 등의 태세를 보여 주는 것으로 보인다. 7월 4일 윤석열은 ‘정보 경찰’ 출신 윤희근을 새 경찰청장으로 내정했다. 서울경찰청은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를 이유로 대학생진보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는 복합 위기 조짐 때문에 불만과 저항이 빈번해지고 격해질 가능성이 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경찰의 수사 권한을 강화해, 안보수사대의 권한도 커졌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에 이행되도록 돼 있지만, 사실 국정원의 대공 정보 수집 등의 기능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전보다 공안 수사는 더 강화될 수 있다.

《세기와 더불어》출판사와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위반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F-35 배치에 반대했다가 구속됐던 청주 평화운동가들이 구속 기간 만료로 얼마 전 석방됨에 따라, 남북경협 사업가 김호 씨는 현재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수감돼 있는 유일한 피해자다. 김호 씨도 석방돼야 한다.

김문성

이렇게 생각한다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른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빈국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사실 개발도상국·빈국에서는 이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잇달아 벌어졌고, 그것이 2011년 아랍 혁명과 2019년 저항 물결을 촉발했다.

선진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기록적인 수준이다.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장(미국 중앙은행 총재)인 폴 볼커가 물가를 잡으려고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 '볼커 쇼크'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도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퍼센트대로, 1998년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상황에서 식료품비와 연료비가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빈곤층과 서민층일수록 큰 타격을 입고 있다.

체제의 상태는 지배자들이 보기에도 상당히 걱정스럽다. 어떤 선택을 하든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컨대 금리 인상은 선진국들의 전반적인 경제 상태를 볼 때 심각한 불황을 촉발할 가능성이 높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해 노동자들이 물가 통제를 요구로 채택할 수도 있고, 시장 이데올로기를 크게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1980년대에 지배자들은 금리를 올려 불황을 일으키고 노동계급의 저항을 짓밟는 식으로 대응했다. 현재 미국·유럽 지배자들 사이에서 금리 인상을 두고 벌어지는 논쟁도 본질적으로 이번에도 노동계급을 공격할 것이냐를 둘러싼 것이다.

지배자들은 이런 공격이 노동계급 측에서 어떤 대응을 낳을지도 걱정한다.

그러나 지배자들이 불황을 감수하고 금리를 올리며 공격에 나설 가능성은 매우 현실적이다.

현재의 인플레이션은 구체적 양상에서도 지배자들에게 걱정을 안겨 준다. 에너지 가격 급등은 선박 운항과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많은 사람들을 기근이나 심각한 빈곤의 위험에 빠뜨린다. 집값도 영향을 받을 것이다.(비록 매우 최근에는 집값이 급락하고 있을지 몰라도 말이다.)

이런 생계비 문제는 광범한 노동계급 대중에게 영향을 미친다. 대량 해고 같은 문제가 고용된 노동자들에게 직접적 타격을 준다면, 생계비 위기는 고



혁명적 좌파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맞서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는 저항이 보편화될 가능성을 만들어 낸다.

인플레이션의 원인을 둘러싸고 이데올로기적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윤석열 정부 등 여러 나라의 정부들은 인플레이션을 우크라이나 전쟁 탓으로 돌린다. 물론 여기에는 일말의 진실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주요 식량 수출국인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은 분명 인플레이션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인플레이션은 명백히 전쟁 전부터 시작된 것이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으로서 임금-물가 악순환 이론이 부활하고 있다. 그런 이론을 근거로 지배자들은 노동자들이 임금 억제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근 경제부총리 추경호가 힘주어 바로 이런 주장을 했다.

이에 맞서 혁명적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지금 벌어지는 일을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마르크스주의 이론으로도 인플레이션은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그러나 분명 이번 물가 상승은 팬데믹 동안 누적된 수요가 공급 차질, 노동력 부족 등과 맞물리면서 촉발된 것과 분명 관계있다. 전쟁과 기후 위기는 이를 악화시켰으며 아프리카나 중동 등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민간부문의 부채를 상쇄하는 방법이기도 하다.(국가 부채를 상쇄하는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지금 인플레이션의 주된 추동력은 아니어 보인다.)

특히, 기업들의 이윤이 인플레이션을 추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이것의 가장 두드러지는 사례는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다. 하지만 한국의 에너지 기업들인 SK이노베이션, 에쓰오일,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사들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조 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갑절로 늘었다. 그러나 단지 에너지 기업들뿐 아니라 다른 여러 기업들도 가격을 올려 이윤을 보전하고 있다.

혁명적 좌파는 인플레이션에 관한

지배자들의 이데올로기적 공세에 맞서 이런 점들을 폭로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지금의 인플레이션이 투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을 봐야 한다. 스리랑카, 이란, 알바니아 등지에서 이미 거대한 거리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영국과 미국 같은 곳에서조차 투쟁의 불씨가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다.

이런 투쟁들이 어떻게 발전할지는 조금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현재 경제 상황이 전 세계 곳곳에서 투쟁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한국에서도 경제가 더 침예한 위기로 치달을 때는 그런 저항이 더 절실해질 것이다.



7월 2일 6만여 명이 참가한 전국노동자대회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정선영

지난 6월 28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놓고는 물가 인상의 책임을 엉뚱하게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것이다.

추경호의 발언은 최저임금 인상률이 고작 5퍼센트에 그치도록 하는 데에도 영향을 끼쳤다. 이는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임금을 삭감하는 효과를 낸다. 추경호는 노동자들 내의 임금 격차를 걱정하는 듯이 말했지만, 실상은 대기업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억제 발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도 공격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임금 인상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은 최근 들어 보수 언론에서 자주 나온다. 최근에는 한국은행 부총재 이승현도 같은 주장을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언론들은 8퍼센트가 넘는 미국의 물가 상승이 구인난으로 인한 임금 인상 때문이라고 보도했지만, 사실이 아니다.

경제사 연구자 애덤 투즈에 따르면, 미국에서 2020년 2분기부터 2021년 말까지 이뤄진 물가 상승의 53.9퍼센트는 기업 이윤 증가에 따른 것이었다. 38.3퍼센트는 원자재, 에너지, 기계 등

의 가격 상승 때문이었다. 임금 인상이 끼친 영향은 7.9퍼센트에 불과했다.

요컨대 이윤 주도 물가 상승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이다.

팬데믹 때문에 세계적으로 심각하게 위축된 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에너지, 원자재, 기계 등의 공급 차질이 벌어지며 그 가격이 상승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런 공급 차질을 더 악화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에너지 기업들은 유리한 지위를 이용해 막대한 이윤을 벌어들였다. 세계 1위 석유 기업인 사우디 아람코의 올해 1분기 이윤은 전년 대비 80퍼센트 늘었다고 한다. 미국의 엑손모빌도 올해 2분기 25년 만에 최대치의 이윤을 기록할 것이라 한다.

다른 대기업들도 가격을 인상해 원자재 비용 상승의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겼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유사들이 벌고 있는 막대한 이윤이 이를 보여 준다.

한국은행은 올해 4월 기업의 비용 압력은 전년 동기 대비 11.73퍼센트 증가했지만, 실제 제품 판매 가격 인상폭은 15.28퍼센트였다고 발표했다. 기업들이 실제 원가 상승보다 제품 가격을 더 인상해 이윤을 늘렸다는 말이다.

그럼에도 기업들의 향후 전망이 밝은 것은 아니다.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로 인해 세계 경제가 침체에 들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들의 전망도 어두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기업들의 법인세는 낮추고, 수출 기업들을 위한 무역 금융 규모는 40조 원 확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임금을 억제해 기업주들의 이윤을 지원하려 한다.

고통 전가

그러나 물가 상승의 고통을 노동자들이 져야 할 이유는 없다.

노동자들은 이미 팬데믹 기간 내내 낮은 임금에 시달려 왔다. 한국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2020년 0.5퍼센트로 제

자리걸음을 했고, 2021년에도 2퍼센트로 경제성장률 4퍼센트의 절반에 불과했다. 한국 경제에서 노동자들이 차지하는 몫이 그만큼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인력난을 겪은 IT 기업 등 소수 대기업에서 임금이 상당히 오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지난해 110개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율은 그 전해에 견줘 떨어졌다(7.6퍼센트에서 7.2퍼센트로). 대기업 임금 인상률도 기업주들이 가져간 이윤 증가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다.

치솟는 물가 때문에 (노동자들이 막대한 규모와 투쟁성으로 저항하지 않는다면) 올해 실질임금은 삭감될 가능성이 크다. OECD는 '6월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의 실질임금 상승률은 지난해 대비 -1.84퍼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다.

물가도, 금리도 오르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그야말로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다.

물가 인상이 전체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만큼 혁명적 좌파를 비롯한 사회주의자들은 임금 인상을 단지 개별 사업장의 임단협 쟁의 정도가 아니라 계급적 저항을 구축할 쟁점으로 여겨야 한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벌어진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민주노총의 대응은 아쉬움이 있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파업은 생계비 위기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고통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투쟁이었다. 그럼에도 민주노총 중앙과 주요 연맹들이 지지 성명을 발표하고, 공공운수 중앙 상근자들이 홍보전과 한 차례 촛불집회를 연 게 전부였다.

▶ 5면으로 이어짐



유가 상승으로 정유사는 이익을, 노동자들은 생계비 상승을 겪고 있다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과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아니라, 바이든 방한을 반대하는 급진적 구호를 내건 점이 수사를 벌이는 진정한 이유일 것이다.

대진연은 반미·반우파·통일 운동을 해 온 단체다. 최근에는 특정한·미·일 군사협력 움직임 등 윤석열 정부의 친미 행보를 집중 비판해 왔다.

경찰이 문제 삼은 시위도 바이든에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킨 책임이 있다며 그의 방한에 반대한 것이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더 첨예해지고, 미·중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바이든은 미국의 패권 유지 전략에 한국이 적극 협력해 줄 것을 요구하려고 방한했다. 윤석열은 바이든의 요구에 적극 화답했다. 이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득을 보려는 것이다.

미국의 의도는 얼마 전 나토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미국은 유럽에 있는 미군 전력을 대폭 증강하고, 중국 포위·압박에 나토도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나토 회원국이 아닌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을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 초청했고, 윤석열은 한국 정상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는 윤석열의 친미 행보에 반대하는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시도.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를 하는 학생들

으로는 처음으로 참가해 미국과 서방편을 들었다. 나토 정상회의 자체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대를 보여 주는 자리였다. 이는 세계를 더 큰 위험에 빠뜨리고, 전 세계 평범한 사람들의 생계를 위기에 몰아넣는 짓이다.

따라서 바이든의 방한을 환영할 이유가 없었다.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전적으로 부당하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친미 행보에 따른 정치적 단속이기도 할 테다.

경찰은 2019년 당시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 19명을 연행해 일부에게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월담 시위와 관련해 통일운동 단체 평화이음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당시 시위를 벌인 대진연 회원들은 미국 대사를 향해 상징적 항의 제스처를 한 것일 뿐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저지르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중 회원 4명은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라는 부당한 판결을 받았다.

문재인의 경찰이나 윤석열의 경찰이

나 '질서 유지'를 내세워 여러 통제와公安 수사에 앞장서는 것은 매한가지다.

경찰이 이번 수사 착수를 언론에 공개했다는 건 일종의 경고 메시지로 보인다. 안보 위기 속에서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서울 용산경찰서가 대진연 수사 착수를 발표한 지 보름 만인 6월 30일,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일성 회고록《세기와 더불어》를 출판한 민족사랑방 출판사와 인쇄소, 출판사 대표와 직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

박혜신

▶ 4면에서 이어짐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도 실질적인 대중투쟁은 조직되지 못했다. 최저임금 쟁점이 민주노총의 주요 노동조합들과 직접적 관계가 적다는 부문주의적 전망 속에서 계급 지향적 투쟁이 건설되지 못한 것이다.

심각한 물가 인상으로 인한 생계비 위기에 대응하려면 협소한 경제주의적·부문주의적 관점이 아니라 전계급적 투쟁을 일궈 내려는 관점이 중요하다. 그런 접근법으로 광범한 연대를 건설할 정치 조직이 기층에서 성장해야 한다.

임금과 물가에 관한 마르크스의 지적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낳는다는 말은 기업주들이 임금 인상을 공격하려고 오랫동안 반복해 온 레퍼토리이다. 그래서 마르크스도 150여 년 전에《임금, 가격, 이윤》이라는 책에서 이런 주장을 날카롭게 비판한 바 있다.

마르크스는 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이 아니라 이윤 감소와 직접적으

로 관련된다고 지적했다. “임금율의 전반적 상승은 평균이윤율의 저하를 초래할 것이나, 전체적으로 상품의 가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다.”

상품 가격은 근본에서 상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입된 사회적 노동시간(마르크스는 이를 “노동의 가치”라고 불렀다)의 영향을 받는다. 자본주의

에서는 이 가치를 기준으로 기업들 간의 경쟁을 통해 상품 가격이 형성되기 때문에, 임금(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 마르크스는 이를 “노동력의 가치”라고 불렀다)이 올랐다고 해서 자본가들이 바로 상품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자본가들이 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제국주의와 민족 자결권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좌파 내 논쟁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여러 좌파, 국내에서 사회진보연대 등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민 방위 전쟁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이 핵심 쟁점이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이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는 사람들 중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이 침공에 계속 맞서 싸우고자 한다면 어찌 우리가 무기 지원에 반대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분명,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에서 즉각 철군해야 마땅하다. 푸틴이 어떤 명분을 내세우든 러시아의 침공은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이익을 위한 것에 불과하다.

사회주의자들은 억압받는 민족(또는 국민)의 자결권이라는 대의를 지지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 러시아 혁명의 리더 레닌은 수많은 소수 민족을 예측시켜 '민족들의 감옥'으로 불린 제정 러시아에서 활동하면서, 자결권 문제를 치열하게 고민해야만 했다.

그는 억압하는 민족의 노동자가 억압받는 민족의 자결권을 지지하지 않고서는 지배자들의 반동적 사상과 결별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더구나 억압받는 민족의 해방은 제국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으므로 혁명가들은 그런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결권

그러나 자결권의 성취가 자동으로 노동계급의 국제적 단결이나 제국주의의 약화를 낳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당시 많은 사회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자결권'을 지지했다. 제2차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이 겪은 쇼아, 즉 홀로코스트가 그런 지지의 동기가 됐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건국은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인들을(서방 제국주의에 의존해) 쫓아내고, 중동에서 후자의 침범이 될 때만 가능한 일이었다.

1990년대에 유고슬라비아 해체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도 자결권이라는 대



우크라이나인들은 러시아의 침공에 저항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서방 제국주의에 기대어 항전을 수행하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할까?

의가 서방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이용돼 오히려 또 다른 억압을 낳기도 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세르비아계와 크로아티아계, 알바니아계 등 여러 민족이 뒤섞여 살던 옛 유고슬라비아는 동구권 스탈린주의 체제 붕괴 상황인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에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자 지배자들이 노동계급의 저항을 분열시키려고 배타적 민족주의를 부추기면서 견잡을 수 없는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1999년 봄 나토는 알바니아계 코소보인들을 세르비아군의 공격에서 지킨다는 명분을 내세워 '인도주의적' 개입에 나섰다. 나토는 세르비아를 폭격하고 알바니아계 민족주의 게릴라인 코소보해방군(KLA)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것은 전쟁에 희생된 보통 사람들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나토의 지배력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나토의 개입을 두고 국제적으로 좌파들은 큰 혼란에 빠졌다. 나토의 폭격을 지지하지는 않아도, 코소보해방군을 나토가 무장시키는 것은 지지하는 식이었다.

나토의 개입은 여러 민족이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사회를 발칸반도에 실현하기는커녕 더 많은 '인종(또는 민족) 청소'를 촉발했다. 코소보에 사는 세르비아인과 로마인('집시') 20만 명이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때 코소보해방군은 인종 청소에 가장 열심인 세력의 하나였다.

중동 쿠르드인들의 비극

자결권 문제가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과 제국주의 약화라는 더 큰 목표에 부합하지 못했던 또 다른 사례는 중동 쿠르드인들의 비극이다.

제1차세계대전 종전 이후 영국과 프랑스가 중동을 분할하자 쿠르드인들은 그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튀르키예(옛 이름 "터키")·시리아·이라크·이란에 나뉘어 살게 됐고, 각각의 나라에서 혹심한 억압을 받았다.

쿠르드인들은 오랜 기간 독립을 위해 싸웠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종종 제국주의에 협력하는 방식으로 목적을 달성하려 했다. 예컨대 2003년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족은 이라크를 침공한 미국에 협력해 얼마간 자치권을 확보했다. 쿠르드족 민병대들은 팔루자 등지의 이라크인 저항 진압 작전에 동참하는 등 미군의 점령에 협조했다.(당시 한국이 파병한 자이툰 부대가 바로 이 민병대들을 훈련시키는 역할을 했다.) 물론 이는 미군의 점령에 맞서 이라크 내 종파간·종족간 분열을 극복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런 의존은 쿠르드족 자신에게도 결국 부메랑이 됐다. 2017년 이라크의 쿠르드 자치 정부가 국민투표를 통해 분리 독립을 시도했을 때, 미국은 동맹국 튀르키예의 반발을 의식하고 중동 지배 질서가 불안정해질 것을 우려해 이를 지지하지 않았다. 결국 분리 독립 시

도는 미국이 후원하는 푸아드 마숨 이라크 정부의 압력으로 좌절됐다. 쿠르드 출신 정치인 바르함 살리흐가 마숨을 잇는 후임 대통령이 됐어도 지금까지 사정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시리아 혁명에 동참했던 시리아 북부의 쿠르드인들도 이슬람국가(ISIS)에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미국에 협력했다. 하지만 2019년 튀르키예가 그들을 폭격했을 때 미국은 외면했다.

쿠르드인들이 제국주의에 배신당하는 역사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며칠 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자신들의 나토 가입에 튀르키예가 반대하지 않는 것의 대가로, 튀르키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온 쿠르드족 사람들을 단속·추방하기로 약속했다.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을 지켜주는 것처럼 구는 서방 국가들이 쿠르드족의 자결권은 헌신짝처럼 내팽개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자결권이라는 대의는 패권 추구를 위한 카드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제국주의자들이 그런 대의를 이용하려 한다고 해서, 자결권 투쟁의 성격이 자동으로 규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성격을 정확히 규정하려면 구체적인 맥락을 봐야 한다.

예컨대 베트남 전쟁에서 북베트남은 소련과 중국의 지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 전쟁은 민족 해방 전쟁의 성격이



서방은 나토 확장을 위해 쿠르드족을 저버렸다 스웨덴·핀란드 나토 가입을 합의한 양국과 튀르키예의 정상·각료들과 나토 사무총장

지배적이었다. 특히, 그 전쟁은 프랑스의 식민 지배에 맞선 투쟁의 연장선상에 있었다. 그 투쟁으로 베트남은 프랑스 식민주의자들을 몰아내는 데 성공했지만 소련·중국의 배신적 합의에 의해 남북으로 분단됐었는데, 범죄적이고 부패한 친미 독재 정권이 통치하던 남베트남에서 일어난 봉기가 바로 베트남 전쟁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한편, 북베트남을 지원한 소련과 중국은 당시에 서로 경쟁 관계였기에 북베트남 지도부는 이를 이용해 둘 사이

에서 어느 정도 정치적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구체적 맥락

그렇다면 지금의 우크라이나는 어떠한가? 이 전쟁은 2014년 우크라이나 지배계급이 친서방으로 확실하게 기울면서 벌어진 충돌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때부터 우크라이나는 서방과 군사적·경제적으로 밀접한 연관을 맺기 시작했다.

그래서 러시아의 침공 후 미국 등 서

방은 엄청난 규모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그들은 이 전쟁을 통해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중국과의 대결에서 더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으며, 전쟁은 갈수록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 위험이 커지는 방향으로 전개됐다. 여기서 젤렌스키는 서방 제국주의의 침범을 자처하고 있다. 향후 우크라이나가 '거대한 이스라엘'이 될 것이라는 젤렌스키의 말에 담긴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국민방위전이라는 성격은 제국주의 간 충돌에 완전히 종속돼 있다. 이런 충돌에서 어느 한 제국주의가 강화되는 것은 사회주의자들에게 대안일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우크라이나인들의 저항을 지지함에도 서방의 군사 지원을 반대하는 이유다.

게다가 지금의 전황을 볼 때 서방의 지원은 러시아에 결정적인 군사적 패배를 안겨 주기보다는 지금의 교착 상태(죽음과 파괴를 수반하는)를 연장시킬 공산이 크다. 그런 만큼 러시아의 패배는 러시아 내의 대중 저항에 달려 있다. 서방 제국주의자들은 적국에서 일어난 것이라 하더라도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대중 저항을 달가워하지 않는다.

수많은 평범한 러시아인들에게 비수를 겨누고 있는 서방 제국주의가 강화되는 것을 사실상 지지하면서 그들더러 푸틴에 맞서라고 호소할 수는 없는 법이다. 서방과 (한국 같은) 친서방 국가의 사회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은 자기 지배자들이 이 전쟁에서 하는 구실을 반대하고, 자기 지배자들이 전쟁을 키우고 있는 것에 반대할 때만, 자신이 평범한 러시아인들의 편임을 보여 주고 그들에게 푸틴에 맞서라고 호소할 수 있다.

이것이 러시아에 살지 않는 우리가 러시아 내 저항을 고취시킬 수 있는 길이다.

이원웅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다반사다. 얼마 전 화성보호소 내의 열악한 조건을 편지로 전해 온 구금 이주민들도 독방에 갇혀 자해를 하는 일이 있었다.

지난달 S 씨도 구금 시설 내부의 기물

을 파손했다. 지속적인 난민 불인정과 9개월에 걸친 장기 구금, 보호소 측의 폭력 등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디다 못해 벌인 일이었다.

보호소 측은 이를 빌미로 S 씨를 경찰에 신고했는데, S 씨는 연행된 경찰서에서 강제 추방될지 감옥에 갈지 선택하라고 강요받았다고 한다. 결국 강제 추방 동의서에 서명한 S 씨는 항공편으로 출국당해 지난달 19일 카이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전해 왔다.

구금 이주민들이 보호소 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S 씨도 이 말을 보호소 직원들에게 수시로 들었다. 이처럼

한국의 출입국 관리 당국은 난민들을 어떻게든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

심지어 난민 당사자가 강제 추방됐을 시 겪을 위험에 대해서 일절 고려가 없다. 난민법조차 난민 인정자 또는 난민 신청자에 대한 강제 추방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해 난민 개인을 압박해서 결국 한국을 떠나게 만들고 있다.

여수보호소 내의 다른 난민도 비슷한 두려움을 호소한다. 한국에서 난민 신청 과정을 밟고 있는 한 리비아 난민은 결국 난민 인정을 못 받아 추방될까 봐 두렵다고 전했다. “리비아는 내전 중이 예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난민이

아니라뇨?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리비아 난민도 언제 끝날지 모르는 난민 인정 절차를 보호소 내에서 밟고 있다. 그는 이미 2년 넘게 심사를 받고도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다. 앞으로도 몇 년이 더 걸릴지 모른다.

이는 난민 한두 명이 겪는 사례가 아닐 것이다. 지난해 난민 신청자 2300여명 중 거의 절반이 불인정 결정을 받아 재신청한 경우였다. 또, 난민 심사에 평균 17개월 넘게 걸렸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억압적인 국경 통제에 의한 고통이 전국 곳곳의 외국인보호시설에서 벌어지고 있다.

박이랑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정진희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의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다. 그 뒤 미국에서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가 허용돼 왔다. 그러나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따라 이제 미국은 각 주가 낙태를 규제할 권한을 갖게 됐다.

미국의 50개 주 중 최소 26곳에서 낙태권이 박탈될 것이다. 낙태에 반대하는 공화당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주가 26곳이다. 이미 22개 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 자동으로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법을 통과시켜 놓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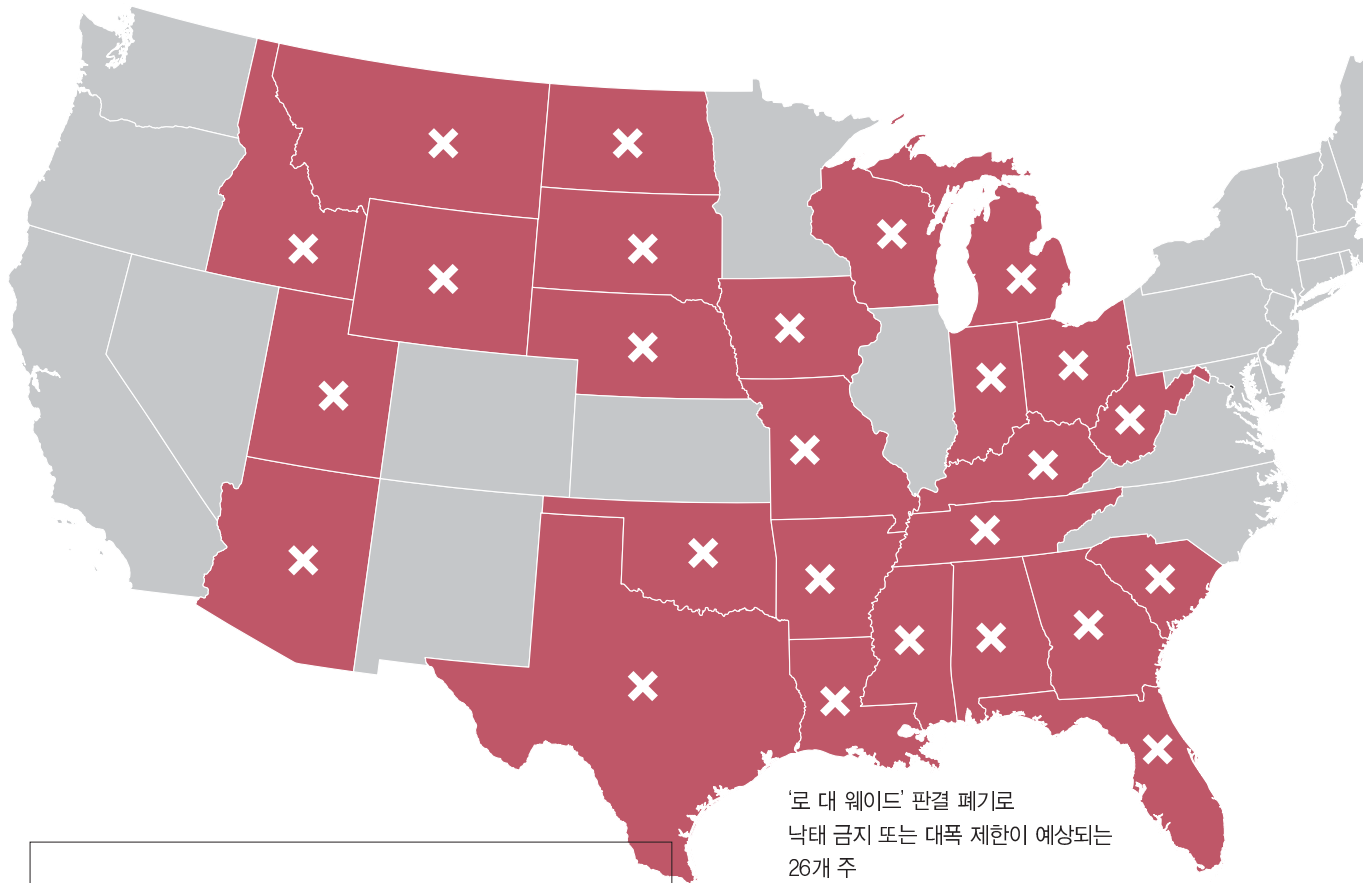
오하이오와 아칸소 주 등에서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6월 24일부터 낙태 클리닉이 문을 닫았다. 아이다호, 노스다코타, 텍사스 주는 대법원 판결 30일 뒤부터 거의 모든 낙태를 불법화한다고 밝혔다.

낙태 금지

낙태 금지는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위협한다. 지난해 미국의 한 연구는 낙태가 금지되면 임신 관련 사망이 21퍼센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의 모성 사망률은 이미 부국들 가운데 가장 높다.

대법원 결정으로 노동계급 여성, 특히 가난한 흑인이나 히스패닉 여성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낙태를 허용하는 다른 주로 이동하는 데 드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하기가 어렵다. 가령 텍사스주는 남한 면적의 7배나 된다. 직장에 휴가를 내고 낙태 시술을 받는 것도 힘들다.

사실 미국인의 다수(10명 중 6~7명)는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는 것에 반대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 초청한 기독교 우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가

대법관 9명 중 6명이 보수 성향 판사인데, 모두 공화당 대통령들이 지명했다. 대법원 구성에서 보수파가 압도 우위가 된 것은 트럼프 정부 들어서다. 트럼프는 대선 때 기독교 우파의 지원을 받으려고 대법원 낙태권 판례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고, 당선 뒤 보수 성향 판사 3명을 대법관으로 지명했다. 미국 대법관은 종신직이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는 미국 우파의 오랜 염원이었다. 우파의 낙태권 공격은 1960~1970년대 급진적 대중운동이 남긴 성과를 없애려는 반격의 일환이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낙태 반대가 공화당 의제는 아니었다. 1970년대 이전에는 많은 공화당원들이 낙태 합법화를 지지했다. 1972년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 리처드 닉슨이 가톨릭 신자와 남부의 민주당 표를 가져오려고 처음으로

낙태 반대 입장을 취했다.

공화당은 1980년 대선부터 기독교 우파와 동맹을 맺었다. 기독교 우파는 레이건을 지지하며 막대한 선거 자금과 투표 기반을 제공했고, 아버지 부시 집권기(1989~1993)와 아들 부시 집권기(2001~2009)에 그들을 지지하며 세력을 엄청나게 확대했다.

트럼프가 후보였던 2016년 대선 당시 공화당은 미국 전역에서 다양한 기독교 우파 조직과 긴밀하게 연결돼 있었는데, 이 조직들의 회원 수가 수백만 명에 달했다.

미국에서 우파는 낙태 문제를 자기 세력을 결집하고 보수적 이데올로기를 퍼뜨리며 평범한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이용해 왔다. 우파 정치인들의 낙태권 제한이 꼭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결과인 것은 아니다.

보수 우파는 전통적 가족 가치를 강조하며 가족 내 여성의 열등한 지위를 옹호한다. 낙태권 공격은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서 중요하다. 여성이 자신의 몸을 통제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은 여성이 가정에서 양육과 돌봄을 묵묵히 수행하게 만들려는 것이다.

보수적 가족 이데올로기는 권력자들이 노동계급을 분열시켜 통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 우파는 낙태권 말고도 트랜스젠더 권리, 인종 차별 같은 문제를 똑같은 목적으로, 즉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고 자신들의 의제로 노동계급 사람들의 지지를 모으는 데 이용해 왔다.

마침내 우파는 수십 년간 계속된 신자유주의 공격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차오른 상황을 이용해 1960~70년대 급진 운동이 남긴 성과를 쓸어버리는 숙원을 성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표를 던지는 게 해결책일까?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대법원 결정을 비판하며 낙태권 보장 방안을 마련할 테니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해 달라고 말한다. 상원에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충분한 의석을 확보하면 낙태권을 보장하는 연방법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 투표하는 것으로는 낙태권을 방어할 수 없다. 사실 지난 수십 년간 우파의 낙태권 공격이 점차 성공을 거두게 된 것에 민주당의 무기력과 기회주의가 큰 몫을 했다.

낙태권을 보장하는 연방법 제정 약속은 이번에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이미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 시절에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그러나 당선 뒤 민주당은 입법을 추진하지 않았다. 클린턴과 오바마 정부 모두 초기에는 민주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했는데도 말이다.

오마바는 개혁 염원에 힘입어 당선했지만 기대를 저버렸고, 부유한 특권층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실시해 대중의 삶을 악화시켰다. 이에 따른 한 몫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다.

민주당은 공화당 의원들이 주 의회에서 낙태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막는 데도 무기력했다. 남부에서는

민주당 의원과 주지사가 공화당이 발의한 낙태 금지법에 찬성하기도 했다. 2019년 켄터키 주 민주당 의원 존 심스는 낙태를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심장 박동법’에 찬성표를 던졌다. 2019년 루이지애나 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주 의회를 통과했는데, 민주당 주지사 존 벨 에드워즈가 이 법안을 승인했다.

민주당은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제대로 맞서지 않았고, 끊임없이 절충안을 찾으려 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4년 뒤 통과된 ‘하이드 수정안’에 대한 태도가 대표적 사례이다. 1976년 공화당 의원 발의로 국회 통과된 ‘하이드 수정안’은

낙태 시술 대부분에 연방정부 기금 사용을 금지한 안으로, 노동계급 여성과 청소년들에게 큰 타격을 줬다. 그러나 민주당은 연방의회 다수를 차지했을 때도 ‘하이드 수정안’을 계속 승인했다.

바이든도 ‘하이드 수정안’을 확고히 지지했다. 그러다 2020년 대선 때 입장을 번복해 ‘당선되면 하이드 수정안을 폐기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 그는 취임 후 낙태의 ‘낙’자도 꺼내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선거를 의식해 낙태권 지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지금도 대중행동을 고무하기보다 민주당에 투표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미국 낙태권 운동의 전략 돌아보기

우파의 공격에 맞서 낙태권을 방어하고 확대하려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말고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성이 참가하는 대중투쟁을 벌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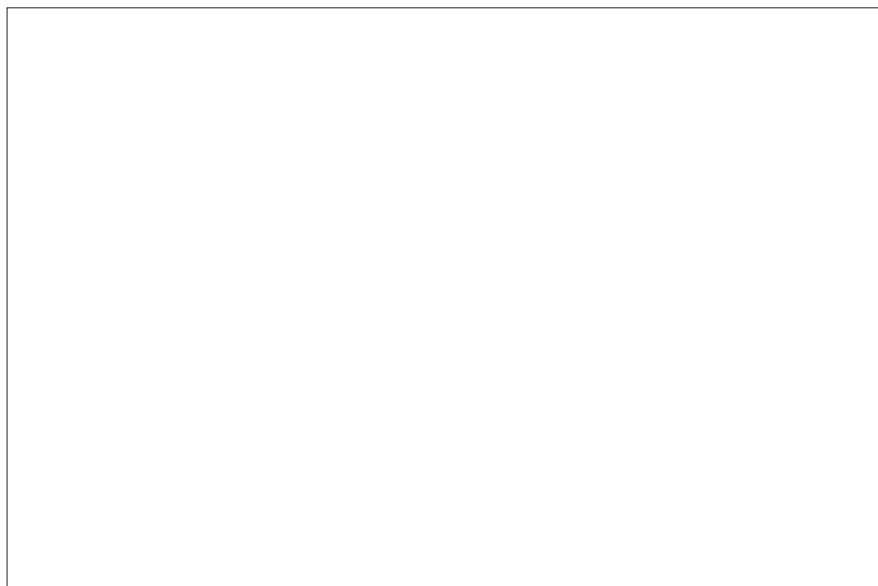
1973년 낙태 합법화를 이룬 것도 대중투쟁을 통해서였지 사회 엘리트들의 선물이 아니었다. 1969년~1973년에 미국 전역에서 낙태 합법화를 요구하는 집회가 수백 개 열렸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은 여성의 권리를 위한 광범한 대중투쟁의 산물이었다.

50년을 후퇴시킨 미국 대법원의 판결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 직후부터 미국 전역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대법원 판결문 초안이 유출된 5월에도 100만 명 규모의 전국적 시위가 있었다.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는 데 성공한 우파는 공화당이 우세한 주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미국 전역에서 낙태를 금지하는 입법도 추진하려 한다. 또 연방대법원 보수 성향 판사들은 더 광범한 공격도 예고하고 있다. 클라렌스 토마스는 ‘로 대 웨이드’ 판례를 폐기하며 피임, 동성애,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판례도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권을 방어하고 극렬한 우파의 공세를 저지하려면 운동이 더 강력해져야 한다. 이를 위해 그간 미국 낙태권 운동의 약점을 돌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우파들은 낙태 반대 운동을 극렬하게 조직해 왔다. 이에 비해, 미국 주류 낙태권 운동은 민주당 정치인들에 의존하면서 운동을 온건하고 수세적으로 벌였다. 가족계획연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대중투쟁의 산물 1971년 미국 수도 워싱턴 DC에서 열린 낙태 합법화 시위

맹, 전국낙태권행동동맹, 전미여성기구 등 대규모 재생산권* 단체들은 전통적으로 민주당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어 왔다.

물론 미국 여성운동은 우파의 낙태권 공격에 맞서 대규모 집회를 열기도 했다. 트럼프 정부하에서는 거대한 여성 투쟁이 분출했다. 트럼프 취임 직후 약 500만 명이 참가한 ‘여성 행진’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주류 페미니스트들은 대중행동을 강화하는 데 힘쓰기보다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키는 데 주력했다.

용어 설명

재생산권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말로 낙태권은 재생산권의 일부이다.

한국 우파와 낙태권 운동 상황

미국 대법원의 낙태권 폐기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파를 고무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낙태 반대 단체들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낙태를 대부분 금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각각 임신 6주, 임신 10주 이내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해 놓고, 최근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향후 2년간 전국 단위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 기간에 낙태 관련 법안을 처리하려 들 수 있다.

민주당이 국회 다수당이니 우파를 견제할 수 있다고 기대해선 안 된다. 지난 3년 동안 민주당은 낙태권을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무시했다. 국회 다수당인데도 낙태권 입법을 하지 않은 것이다. 또 문재인 정부가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인 2020년에 낙태죄를 유지하며 낙태를 제한하는 법 개정안을 냈던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에 반발이 일자 선거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중단했을 뿐이다.

▶ 10면으로 이어짐

이런 전략이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1990년대 경험이 잘 보여 준다. 당시 힐러리 클린턴은 낙태권 지지자들이 낙태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공통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빌 클린턴과 함께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드물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주류 페미니스트 단체들은 이런 타협적 입장을 비판하지 않고 자신들의 메시지로 수용했다. 운동을 온건화시키고 무기력하게 만든 것이다.

주류 여성운동 단체들은 민주당 정부하에서 여러 배신을 겪었지만 계속 막대한 정치자금을 대며 민주당을 지지했다. 그러는 동안 여성이 낙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회는 미국 전역에서 계속 축소돼 왔다.

낙태권 운동이 강력해지려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대중운동 건설을 중심에 놓는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미국 사회주의자가 낙태권 투쟁의 의미와 과제를 말한다

버지니아 로디노

AFL-CIO 여성노조원연합 집행위원장, '마르크스21' 회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국에서 낙태 시술을 받을 기회가 도널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이미 심각하게 불평등했다는 것입니다.

낙태 시술자들이 살해당하기도 했습니다. 미국가족계획연맹과 낙태 클리닉은 낙태뿐 아니라 성교육, 피임 수단, 여성 보건, 건강 검진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지만 정부 예산이 끊겨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기 전에도 10년 동안 낙태를 금지하는 수많은 법이 미국의 여러 주에서 통과됐습니다. 사람들이 죽어 나가는 동안 낙태에 반대하는 정치인들이 잇달아 당선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낙태 문제가 '공화당 대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정치인들을 투표로 뽑아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빌 클린턴이나 조 바이든 등 민주당 정치인들은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전투적인 대중 저항의 발목을 잡는 구실을 했을 뿐입니다.

낙태에 관한 빌 클린턴과 힐러리 클린턴의 선거 슬로건은 낙태가 "안전하고 합법적이고 드물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었죠.

2021년 12월 연방대법관 새뮤얼 알리토의 낙태 반대 의견이 알려진 후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 미국 전역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지만, 민주당이 발의한 전국적 낙태권 보호를 성문화한 법안은 미국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마치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 당시 흑인 농구 선수들이 [운동에 연대해] 경기를 거부한 것에 대응해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경기장으로 돌아가서



사진 출처: Nathan Rupert(블라카)

민주당에 기대는 게 아니라 대중 운동을 건설할 때에만 낙태권을 지키고 되찾을 수 있다

[대선] 투표를 잘하라'고 촉구하며 진정한 행동을 만류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민주당 정치인들은 대중 행동을 촉구하지 않습니다. 바이든은 물론 진보파 민주당 정치인들도 연방대법원에 대한 분노를 이용해 이번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표를 늘리자고나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정치인들이 이처럼 우리의 기본적 권리를 방어하지 못하는 것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이, 우리는 대중 운동을 건설할 때에만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지키고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실 민주당이 추진한 신자유주의 정책이야말로 여성을 빈곤의 나락에 빠뜨리고 낙태 시술과 재생산 보건을 누리게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기업주들의 당인 민주당은 운동을 포섭하고 무력화시키고 운동의 급진성을 제거해서 더 많은 표를 확보하려 할 뿐, 우리가 원하는 진정한 변화를 이뤄 내려 하진 않습니다.

미국인의 60퍼센트 이상이 낙태권을 지지합니다. 말 그대로 한 줌밖에 안 되는 자들이 미국인 다수의 의사를 마음대로 거스른 것이죠.

낙태는 계급의 문제

낙태권이 그저 정치인들의 은혜로 성취된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운동이 정치인들에게 낙태권 인정을 강제했던 것이죠.

생각해 보면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낙태 문제는 저들이 꾸며낸 이른바 "문화 전쟁"이 아니라, 계급 문제입니다. 낙태권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선거에서 이런 분석을 내놓는 정치인은 없습니다.

지배계급은 여성에게 공짜로 양육을 맡겨서 다음 세대 노동력을 길러 내기를 원하지만, 여성의 지속적인 노동력도 필요로 하는 모순된 처지에 있습니다.

여성의 삶에 여러 진보와 변화가 있었지만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한 낡은 관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관념인즉슨,] 가족은 사회의 가장 중요한 주춧돌이고, 여성은 그 안에서 양육자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데올로기가 여전히 사람들의 의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가족이 다음 세

대 노동력을 길러 내는 경제적 부담을 떠안는 것을 당연시하게 만듭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여성 권리에 대한 거세지는 공격이 극우의 부상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트럼프 정부하에서 극우가 크게 성장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극우·파시스트 운동에는 여성의 지위를 공격하는 남성 지도자들이 있었으며, 이들은 가족 내 전통적 성 역할을 강요하고 낙태에 반대했습니다. 현재 극우는 전 세계적으로 부상하고 있고, 1960년대부터 여성들이 쟁취해 온 성과를 표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재생산에 관한 권리는 핵심적인 계급 문제입니다. 낙태권은 노동자의 권리입니다. 재생산에 관한 권리에는 피임을 통해 자신의 건강과 성생활에 관한 결정을 내릴 권리도 포함됩니다.

이런 권리를 쟁취하려면 힘을 합쳐 저항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삶에 대한 통제권을 기업과 우익 판사들, 정치인들에게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이 쟁점으로 국제적 연대를 건설할 상당한 기회가 있습니다. 예컨대 동성애자나 성소수자 해방 운동 같은 다른 운동과 연대를 건설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지난날 미국·캐나다 등지의 자금심 행진에서 이런 식의 연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주의자로서 정치적 주장을 통해 노동조합원들과 노동조합 지부를 투쟁에 끌어들이고, 거기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역량을 투여하게 하고, 사람들을 행동에 동원해야 합니다.

이 분노가 투표함 속으로 사라지게 내버려 뒀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되찾는 것은 오직 대중운동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번역 이원웅

▶ 9면에서 이어짐

3년 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은 여성운동의 성과였다. 그러나 그 뒤 개선된 게 별로 없다. 낙태죄는 효력 정지됐지만, 여전히 병원비가 비싸 가난한 여성들의 고통이 크고 낙태에 대한 낙인도 여전하다. 낙태권 운동이 대중운동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주류 정치인들은 여성들의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는 압력을 크게 받지 않았다.

기성 여성운동 바깥에서 새롭게 급진화한 청년 페미니스트들이 벌였던

낙태권 운동은 한때 활력을 보여 줬지만, 전략과 정치적 전망의 부재로 안타깝게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자마자 중단됐다.

엔지오가 주도하는 여성운동은 민주당에 의존해 입법 중심으로 활동하며 운동을 협소하고 온건하게 펼쳤다. 여성단체연합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며 비판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은 대중 동원 능력이 있음에도 몇몇 간부가 기자회견에 참가하고 성명서를 발표하는 수

준에 그쳤다. 자기 조합원이나 당원을 동원해 운동을 확대하려 하지 않았다.

낙태권 문제에서 실질적 진전을 이루려면, 민주당에 의존하지 않고 기층에서 대중운동을 건설하는 전략을 택해야 한다. 대중운동을 건설하려면 낙태권이 노동계급의 문제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부유한 여성들은 낙태권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아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는다.

낙태권이 일정하게 보장된 나라들을 보면, 모두 노동계급의 여성과 남

성이 참가하는 대중운동을 통해 성과를 거뒀다. 물론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자본주의에서는 투쟁을 통해 얻은 성과도 공격받고 빼앗길 수 있다. 무자비한 우파에 대중운동으로 반격해야 성과를 보존할 수 있다.

미국에서 광범한 대중운동이 발전해 빼앗긴 권리를 되찾고 나아가 여성 해방을 위한 투쟁이 성장하기를 바란다. 한국에 사는 우리도 우파의 낙태 반대 공격에 맞서 기층에서 낙태권 운동의 초석을 쌓아야 할 것이다.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안형우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리프로액션'의 페이스북 그룹에서는 이번 판결 폐기 전부터 낙태약 관련 게시물이 차단당해 왔다. 그룹 폐쇄를 막기 위해 리프로액션은 회원들이 낙태약에 관한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게 해야 했다.(<와이어드>)

낙태 관련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는 '어보션 파인더'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2년 간 아무 문제 없이 운영되다가 판결 폐기 이후 차단됐다(이후 복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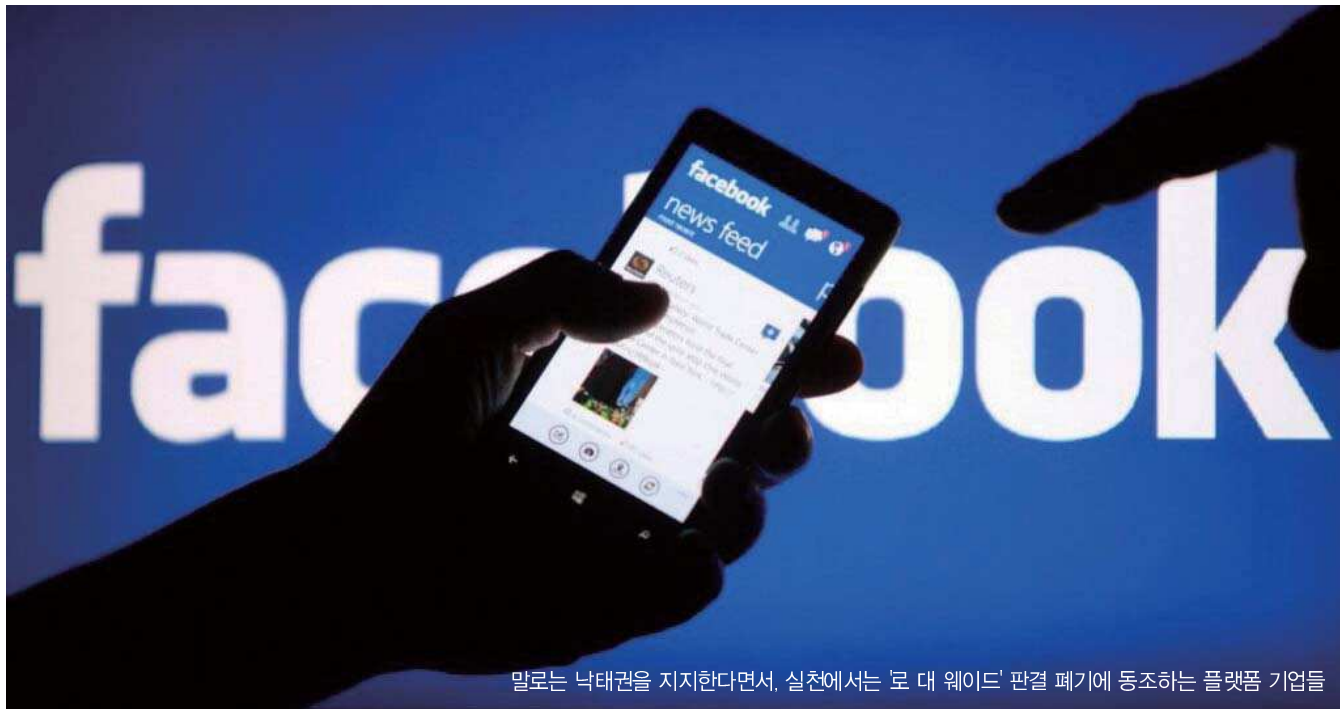
인스타그램은 최근 몇몇 낙태 게시물에 민감한 정보라는 뉘앙스가 잘못 씌워졌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

<바이스>, <AP> 기자가 실험용으로 올린 낙태약 제공 게시물은 커뮤니티 규정 위반 딱지와 함께 1~2분 만에 신속하게 차단됐다. 실험을 반복하자 계정이 차단됐다.

페이스북은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의약품 거래나 증여를 시도하는 콘텐츠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바이스>와 <AP>의 실험에서 총이나 마약을 부쳐 줄 수 있다는 게시물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규정에 금지돼 있는데도 말이다.

정작 커뮤니티 규정 위반도 아닌 낙태약 주문 방법 안내 게시물은 삭제됐다. 페이스북은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변명했는데 상투적인 말에 불과하다. 아마 낙태 관련 게시물을 그런 식으로 검열하도록 알고리즘을 학습시켰기 때문일 것이다.

페이스북, 아마존 등이 낙태가 불법인 주에서 일하는 직원의 낙태 여행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들이 낙태권 지지에 진지하다고 볼 수 없다. 심지어 아마존은 낙태권 반대 주지사를 후원해 온 것이 들쭉났다.



말로는 낙태권을 지지한다면서, 실천에서는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동조하는 플랫폼 기업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낙태약 제공 게시물을 차단하는 건 미국 우익이 주도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사실상 동조하는 셈이다.

이것은 극우의 부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더 많이 검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가 공상적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은 서구 자유주의자 중 많은 수가 온라인 플랫폼을 탓하며 규제 강화를 주문해 왔다. 온라인에서 번지는 가짜뉴스와 혐오 표현이 정치 양극화를 부추기고 극우 성장의 동력이 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규제 강화는 극우를 약화시키지 못했다. 지난해 초 미국에서 극우의 국회의원사당 공격 이후 트럼프는 트위터와 페이스북에서 모두 쫓겨났다. 그러나 국회의원사당 공격에 대한 최근 청문회를 공화당이 공식 보이콧한 데서 알 수 있듯 트럼프의 영향력은 건재하다. 극우의 부상은 온라인 플랫폼 덕분이 아니라, 사회의 심대한 위기에 주류 정치 세력이 해결책을 제공하지 못한 것과 연관 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트럼프와 그 지지자들을 단속한 것은 이윤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지, 극우에 반대해서가 아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트럼프 임

기 내내 그의 게시물을 특별 대우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자유주의적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꼭 그런 것도 아니다.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유명한 극우 인사는 페이스북의 초기 주요 투자자이고 17년간 이사로서 페이스북에 큰 영향을 끼친 피터 틸이다. 그는 2016년 트럼프 대선 캠프에 125만 달러를 기부하고 지지 선언을 했다.

위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일상적 검열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왔다. 저항적 게시물에 극단주의 딱지를 붙이고, 실리콘밸리 백만장자들이 생각하는 '정상' 범주에서 벗어난 게시물이 검열되곤 한다. 맥락을 고려할 능력이 없는 무심한 인공지능이 투입되면서 이런 일은 더 심해졌다.

2011년 한 동성 커플이 키스를 했다고 술집에서 퇴거 요청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은 이에 항의하는 온라인 캠페인으로 동성 커플 사진을 게시했다. 그런데 누군가 이 사진을 '모욕적인 자료'라고 신고했고, 페이스북이 이를 받아들여 게시물을 삭제하는 일이 벌어졌다.

2015년에는 캐나다의 한 젊은 시인이 생리에 관한 금기를 다룬 시와 함께 생리혈이 묻은 옷과 이불을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다. 이 게시물도 신

고를 받아 하루 만에 삭제됐다.

다행히 이 사례들에서는 항의 후 게시물이 복구됐다. 그러나 웬만큼 주목받지 않는다면 게시물이 복구되는 일은 거의 없다.

오늘날 아랍 세계 활동가들에 대한 온라인 플랫폼의 태도는 2011년 아랍 혁명에서 자신들의 역할을 과장스럽게 떠벌린 것에 비춰 보면 위선의 극치다.

2019년 가을 이집트에서 2000명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직후 트위터는 시위 소식을 전한 계정 수십 개를 미심쩍은 이유로 차단했다. 6개월 뒤 튀니지에서는 인권 운동가와 저널리스트의 페이스북 계정 수십 개가 정지당했다. 페이스북은 기술적 오류라고 둘러댔다.

2011년 혁명 직전 수많은 사람들이 소식을 얻던 이집트 반정부 운동 페이지를 실명으로 운영하지 않는다고 페이스북이 차단해 버린 사건은 유명하다. 유튜브는 시리아 내전에서 정부군의 만행을 고발하는 동영상상을 폭력적 영상이라며 대량으로 제거해 버렸다.

오늘날 중요한 소통 도구인 온라인 플랫폼은 이처럼 어떤 민주적 책임도 지지 않는 대기업의 손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들에게 게시물 규제 강화를 요구하는 것은 노동계급에게 부메랑이 되 돌아올 것이다.

수단

대규모 항쟁이 거리를 휩쓸다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불구하고 수단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9명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2019년 4월, 수단을 30년 동안 통치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대중 항쟁으로 제거됐다. 하지만 정권은 여전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거리의 혁명가들은 완전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며 혁명을 완수하려 한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6월 30일 대규모 거리 시위가 수단을 휩쓸어, 군사 정부에 굴종하지 않겠다는 평범한 사람들의 뜻을 강력하게 표현했다. 최근에 열린 시위들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번 시위대는 행진을 마치고 수도 하르툼의 두 곳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이런 점거는 2019년에 정권을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은 단호한 점거 투쟁 전술을 떠올리게 한다.

당국은 여느 때처럼 무자비한 탄압으로 대응했다. 그날 오후 10시 활동가들의 보도에 따르면, 군경이 9명을 살해했고 대부분 수단 제2의 도시 옴두르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한다. 저격수가 옴두르만의 성(聖)코란대학교 옥상에서 행진 대열에 실탄을 발사했다.

하르툼에서는 경찰이 최루탄과 물대포를 동원해 시위대가 대통령궁으로 행진하는 것을 막으려 했다. 그럼에도 행진은 중단되지 않았다. 하르툼 북쪽의 바흐리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알막니메르 다리를 건너 군경을 밀어냈다.



군부의 무자비한 탄압에도 다시 저항에 나선 수단 민중

그 후 하르툼의 알무앗사사 지구와 바슈다르 지구에서 점거가 시작됐다. 점거는 일단 24시간 동안 지속될 계획이라고 발표됐지만, 참가자들의 투표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앞서 시위대는 돌과 불타는 타이어를 쌓아 하르툼의 주요 도로 일부 구간을 봉쇄했다. 수단의 두 민간 통신 기업의 노동자들에 따르면, 정부 당국은 인터넷을 6월 30일에 종일 차단하라

고 명령했다고 한다.

수단의 독립언론 <라디오 다방가>는 다르푸르의 도시 니알라와 잘링게이, 남코르도판주(州)의 주도 카두글리, 수단 동부의 엘게다레프·카살라, 수단 북부의 동골라·아트바라 등의 도시에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했다. 홍해 연안 바흐르알아흐마르주(州)의 주도 부르수단에서는 시위 진압에 최루탄이 동원됐다.

지난해 10월 25일 군 장성 압텔 파타 알부르한이 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이래 수단 대중은 8개월 동안 용감하게 싸웠다. 알부르한의 쿠데타는 이른바 ‘민주주의로의 이행’ 과정을 끝장내 버렸다. 그리고 군부와 민간인 지도자의 허구적인 “권력 분점 합의”도 끝장내 버렸다.

6월 30일은 상징성이 있는 날이다. 1989년 6월 30일은 오마르 알바시르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한 날이기 때문이다. 알바시르는 30년 가까이 수단을 통치하다 2019년에 항쟁에 밀려 퇴진했고, 이는 지속적인 항쟁과 혁명 과정을 촉발했다.

저항위원회들의 네트워크가 행진을 조직했다. 민주적으로 조직되는 지역 단위 조직인 저항위원회는 활동가들을 규합하고 군부에 맞선 저항을 조직한다.

하르툼의 저항위원회 ‘샤르그 알 날 자누브 조정위원회’의 한 위원은 “오늘을 기해 인민 혁명의 과정에 다시금 매진할 것”이라고 <소셜리스트 워커>에 전했다.

‘하르툼주(州) 저항위원회 조정기구’는 이날 행진이 “쿠데타 정부의 억압적인 권력을 타도할 강력한 폭풍”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쿠데타 정부를 타도하기 전까지는 물러서지도, 의무를 저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길 때

▶ 13면으로 이어짐

수단 혁명 연표

2018년 12월:

빵과 기타 생필품 가격이 3배로 오르면서 시위가 분출하다. 시위는 삼시간에 오마르 알바시르 정권에 대한 정치적 항쟁으로 발전한다.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알바시르는 거의 30년 동안 수단을 통치했다. 탄압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이후 3개월 동안 계속된다.

2019년 4월:

수도 하르툼에서 행진을 마친 시위대가 해산하지 않고 국방부 청사 주변을 점거한 채 무기한 농성을 시작한다. 시위대는 침탈에서 스스로를 지키고자 바리케이드를 치고, 식량·물·치안을 직접 조직하고, 문화 활동을 벌이고, 끊임없이 토론한다. 이런

사례가 다른 도시로도 확산된다. 그리고 노동자들이 단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작업장에서 조직된 집단으로서 저항하기 시작한다.

2019년 4월 11일:

시위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한 군부 지도자들이 알바시르가 제거됐다고 발표한다. 그러나 군부는 권좌에서 물러나지 않는다. 시위와 점거가 계속되고 5월 28~29일 노동자들이 강력한 총파업을 벌인다.

2019년 6월 3일:

악명 높은 준군사 조직인 신속지원군이 이끄는 군부의 병력이 하르툼 점거를 침탈해 최소 110명이 목숨을 잃는다. 그럼에도 시위와 파업은 계속된다.

2019년 8월:

항쟁 지도부가 군부를 완전히 타도할 시위를 건설하지 않고, 배신적인 “권력 분점”을 군부와 합의한다.

2019년 10월:

더딘 개혁과 경제적 어려움에 분노한 수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섰다.

2020년 7월:

“혁명의 경로를 바로잡기 위해”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행진을 벌인다.

2021년 10월:

합의에 따라 권력을 이양해야 했던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킨다. 거리 시위가 즉각 벌어져 이에 맞선다.

2021년 11월 6일:

수단 전역에서 100만 명이 군부 반대 시위를 벌인다. 시위대는 도로를 봉쇄하고 군부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보여 준다.

2021년 11월 21일:

군부에 의해 축출된 민간인 총리 압달라 함독이 쿠데타를 주도한 압델 파타 알부르한과의 거래를 통해, 민정 이양의 모양새를 취하는 기술 관료 정부를 이끌게 된다. 쿠데타 반대 진영은 대부분 이 거래가 사실상 군부가 권력을 부지하는 것에 분칠을 해 주는 사기극이라고 규탄한다.

2022년 1월 2일:

대규모 거리 시위가 계속돼 함독이 사임한다. 유엔과 서방 열강은 거리 시위대와 군장성들 사이에서 타협을 계속 모색한다.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보고한 것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정부들이 마치 담합이라도 한 듯 팬데믹이 끝난 것처럼 굴고 있다. 감염병 확산을 막는 데 결정적인 도움이 되는 생계 지원이나 유급 휴가를 중단했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정보도 제공하지 않아 사람들의 혼란은 더욱 크다.

윤석열 정부도 7월 11일부터 소득 하위 절반에게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유급 휴가 지원도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대폭 줄였다. 경증 환자에게는 더는 치료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상황이라면 확진돼도 대부분 출근할 수밖에 없다. 확진자의 격리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발표와는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다.

거듭되는 변이

그러는 사이에 코로나바이러스는 변이를 거듭하고 있다. 올 초 대유행을 일으킨 오미크론 변이는 이미 그 하위 변이들에 주요종 자리를 내줬다. 대략 2달마다 새로운 하위 변이가 주요종 자리를 갈아 치우고 있는데 스텔스 오미크론으로 불린 변이(BA.2)도 지금은 남아공에서 처음 발견된 두 변이



생계비와 치료비 지원을 줄이는 게 '과학 방역'?

(BA.4, BA.5)로 대체되고 있다.

백신을 접종했거나 이전의 오미크론에 감염됐거나, 혹은 둘 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의한 감염을 막는 데에는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언제든 올해 초와 같은 대유행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이 그 초입인지도 모른다.

다행히 최근의 변이들은 올해 초에 유행한 오미크론처럼 이전의 코로나바이러스에 비해 치명률이 낮은 듯하다.

그러나 이미 경험한 것처럼 감염이 확산되면 사망자 수도 늘어난다. 전 세계

적으로 매주 400만 명이 새로 감염되고 있고, 그 수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도쿄대학교의 바이러스학자인 게이 사토는 <네이처>지와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했다. “BA.4/BA.5가 마지막 변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오미크론의 새로운 하위 변이가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또, 그는 흔히 알려진 것과 달리 바이러스가 병독성이 약한 쪽으로 진화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경고했다.

테워드로스 사무총장이 각국의 검사 유료화 등 감시 소홀을 문제 삼은 이유

다. 이런 식이라면 새로운 변이의 출현이 매우 뒤늦게 발견될 가능성이 크다.

롱 코비드

미국의 생물학자이자 마르크스주의자인 롭 월러스는 또 다른 위험을 경고하고 있다. 다른 아닌 ‘롱 코비드’인데, 급성기를 넘긴 코로나19 환자들 중에 장기 후유증을 앓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한다. 집중력이 약해지는 ‘경증’ 후유증부터 폐섬유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후유증이 보고되고 있는데, 그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일부 학자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면역 체계에 의해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증상을 일으키지는 않지만) 일정하게 증식을 거듭하며 계속 몸 안에 남아 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과학자들은 알파·오미크론 변이가 바로 이처럼 면역 능력 감소로 인해 코로나바이러스가 장기간 체내에 머물다가 생겨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즉, 롱 코비드가 새로운 변이 출현 가능성을 높이는 구실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심각한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때문에 각국 정부는 다시 대유행이 찾아오더라도, 2년 전보다도 훨씬 무책임하게 방역을 내팽개칠 가능성이 크다. 당연히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제대로 된 검사·치료와 치료비·생계비 지급을 요구하는 것은 개인의 고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무책임하고 냉혹한 방역 정책에 대한 항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장호중

▶ 12면에서 이어짐

까지 한판 붙는 겁니다.

“승리하거나, 싸우다 산화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온갖 배신자, 겁쟁이, 방해꾼의 반대를 뚫고 우리는 이루려는 바를 이를 것입니다. 시위·파업·불복종·바리케이드 등 모든 평화적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시위대는 정권 타도, 민간 정부 수립, 민주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군부가 권력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 하나는 그들이 경제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주 미국의 싱크탱크 고등방위연구소(C4ADS)는 수단의 군부 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408개 사업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를 공개했다. 그중에는 농업 대기업, 은행, 의료용품 수입 기업 등이 있다.

고등방위연구소의 주요 인사들은 미군 핵심부와 연계가 있다. 그래서 수단에서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안다. 그들의 보고서에 따르면, 잔학하기로 악명 높은 신속지원군의 수장 모하마드 함단 다갈로의 가족들은 수단의 주요 은행인 할리지은행의 지분을 28퍼센트 넘게 장악하고 있다. 다갈로는 이밖에도 많은 기업에 지분이 있다.

6월 30일 거리로 나온 수단인들은 엄청난 용기와 결의를 보여 줬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무자비한 정권을 물리칠 수 없다.

저항위원회는 시위 조직 기구인 것에 그치지 말고 군부와 그들의 후원자들에 맞선 대안 권력의 중심이 되어 한다. 이런 노력은 가장 잘 조직된 노동자 부문에서 파업을 건설하는 것과 연결되어야 한다. 통신·운송·금융·항만 부문과 공공 서비스 부문(병원·학교·대학 등)이 바로 그런 부문이다.

최근 수단 교사들은 파업으로 실질적인 임금 인상과 노동 조건 개선을 쟁취했다. 그리고 18개 교사위원회가 6월 30일 시위 동참을 선언했다.

저항위원회 안에서는 핵심적 쟁점이 논쟁되고 있다. 15개 주의 저항위원회가 채택한 ‘인민 권력을 위한 혁명 헌장’

에는 정부 구성을 위한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다. 이 로드맵에 따르면 지방 입법 기구를 선출하는 것에서 [연방 의회와 총리를 선출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쿠데타에 맞선 저항의 일부로서 즉각 시작된다.

하지만 이 헌장은 혼합 경제를 추구하는 데 머무르기에, 부를 생산하고 배분하는 기존의 구조를 대체로 건드리지 않는다. 혁명은 더 심화돼, 정권과 그 경제적 후원자들을 타도하기 위해 조직되어야 한다.

찰리 킴버

출처 영국의 혁명적 좌파 신문

<소셜리스트 워커> 2812호 / 번역 박이랑

노동자연대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 좌파적 대안을 제시하는

노동자연대에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

workerssolidarity.org/join

웹사이트에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자 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노동자 정치 신문

노동자 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10-6491-2792, ws@wspaper.org

wspaper.org/subs2



온라인에서 만나 보세요

새 기사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노동자 연대
wspaper_org
@wspaper
노동자연대TV



wspaper.org/online

스마트폰 앱으로 만나 보세요

▶ "노동자 연대" 검색
▶ 텔레그램 '노동자 연대 알리미'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노동자 연대>와 함께 일하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구독하세요



채널 바로가기

- 주 1회 다양한 주제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 영상
- 주요 시사 이슈를 10분 안에 명쾌하게! 시사/이슈 토크
- 135개 다양한 쟁점을 다룬 맑시즘 강연 음원
- 현장감 넘치는 노동자 투쟁 취재 영상

새 코너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기후 정의,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탈성장과 핵발전 등
총 10회에 걸쳐 기후 위기 문제와 운동 내 쟁점을 다룹니다.

구독하시면, 지금 딱 보기 좋은 영상/음원을 추천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

발행인: 김인식 편집인: 김인식 사업자 명칭: (주)레프트미디어
제호: 노동자 연대 발행연월일창간호: 2009년 3월 14일
인쇄인: (주)디엔코리아 현재호 등록번호: 서울다08179 (주간)
등록연월일: 2009년 1월 12일 주소: 서울시 성동구 하왕십리동
946-644층 전화: 02-777-2792 팩스: 02-777-2791
팩스: 02-6499-2791 email: ws@wspaper.org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2 8

레닌의 ‘혁명적 패배’ 전술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기를 살고 있다.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위협과 열강 간 경쟁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 대응해 러시아·중국을 겨냥하는 새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강대국들 간 갈등이라는 면모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동유럽에서 뿐 아니라, 미·중 갈등이 날로 첨예해지는 동아시아에서도 두드러진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 제국주의 세력(러시아와 중국)에 맞서는 다른 쪽 제국주의 세력(미국과 서유럽 동맹국들)을 “권위주의에 맞선 민주주의 동맹”이라 보고 이들은 지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국내외 좌파 일각에 있다. 이런 주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국들(한국 포함)의 지원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약 100년 전 제1차세계대전 중에도 좌파들 사이에서 비슷한 태도가 있었다. 당시 독일 사회민주당(SPD)은 전쟁 전까지만 해도 반전(反戰) 입장을 내세웠지만, 막상 전쟁이 발발하자 독일의 군국주의에 대한 반대를 철회하고 전쟁 공채 발행에 찬성했다. 청년들이 참호에서 속절없이 희생되는 데 일조한 심각한 배신이었다.

전쟁과 그 원인

영국·프랑스·러시아 등과 독일·오스트리아 등이 맞붙은 제1차세계대전은 그때까지 세계 역사를 통틀어 가장 유혈낭자한 전쟁이었다. 전쟁 사망자만 약 1000만 명에 이르렀다.

러시아 혁명의 리더 레닌은 이 전쟁이 “제국주의 전쟁이고, 자본주의가 최고의 발전 단계에 이른 시대 상황의 결과”라고 봤다.

자본주의하에서 자본가들은 이윤을 위해 끊임 없이 서로 경쟁한다. 그런 경쟁이 진행될수록 자

본들은 한 나라 수준을 넘어 국제적 규모로 성장하고, 경제적 경쟁뿐 아니라 자국 국가기구(의 무력)에 의존해서도 경쟁하게 된다. 그러는 동안 국가기구도 자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고취해 타국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애쓴다.

바로 이렇게, 자본 축적의 동력인 경쟁이 자본주의 강대국들이 세계 지배를 두고 벌이는 각축전과 교차된다. 레닌은 이렇게 경제적·지정학적 경쟁이 교차하는 체제를 제국주의라고 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제1차세계대전의 진정한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는 중요한 함의가 있다. 전쟁을 끝내려면 자본주의에 도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적 사회관계의 토대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제국주의 전쟁은 제국주의의 ‘평화’, 즉 금융자본이 약소국과 소수민족을 억압하는 체제의 확대·강화로 귀결될 뿐이다.”

전쟁의 근본 원인에 도전하지 않는 한, 강대국들이 세계를 두고 벌이는 쟁탈전은 얼마든지 반복될 터였다.

모든 교전국의 노동계급은 그런 쟁탈전에서 볼 이득이 없다. 따라서 계급투쟁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전쟁과 그 원인인 자본주의, 이 모두에 도전해야 한다고 레닌은 강조했다.

“100명의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독일]가 200명의 노예를 소유한 노예주[영국·프랑스·러시아 등]를 상대로 전쟁을 벌인다고 상상해 보라. 여기에 ‘방어적 전쟁’, ‘조국 방위 전쟁’ 같은 표현을 적용하는 것은 역사적 잘못일 것이며, 현실에서는 영악한 노예주가 평범한 사람들을 상대로 치는 사기일 뿐이다.”

따라서 레닌은 이렇게 주장했다. “교전국의 부르주아지들을 모두 악당으로 규정해야 하고, 모든 나라의 제국주의 부르주아지가 패배하기를 바라야 한다.”



제1차세계대전 중이던 1917년 4월, 페트로그라드의 핀란드역에 도착한 레닌

동시에, “모든 교전국의 사회주의자들은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란다고 분명히 주장해야 한다.”

자신들의 “강도질”을 위해 자국민에게 전쟁에 나서라고 대놓고 말하는 지배자들은 없다. 모든 지배자들은 적국의 호전성과 공격성, 야만성을 비난하며 그에 맞서 ‘민주주의’나 ‘정의’를 위해 싸우라고 하거나, ‘우리’ 나라를 지키자고 주장한다.

예컨대 독일은 러시아 차르의 전제정에 맞서는 것이라고 했고, 영국·프랑스는 독일의 확장주의·군국주의에 맞서 정당방위 전쟁을 벌인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세계의 나머지 부분을 두고 벌이는 악당들의 지배권 쟁탈전이었는데도 말이다.

그런 상황에서 당시 독일 사민당은 자국 지배자들이 차르 제국을 상대로 군사적 승리를 거두는 것이 “차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방침은 독일 “부르주아지의 정의”에 따르는 입장이라고 레닌은 비판했다.

반면 교전국 노동계급 대중에게 “자국 정부의 패배는 정부를 약화시키고, 자국의 억압을 받는 소수민족의 해방을 촉진하고,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투쟁을 고무할 것”이라는 게 레닌의 관점이었다.

따라서 사회주의자들이 “모든 나라에서 우선해야 할 것은 바로 그 국가의 국수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 자국 정부에 대한 증오를 일깨우는 것”이지, “더 젊고 더 강력한 강도(독일)가 과식한 늙은 강도를 털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다.

이런 주장은 제국주의 강대국들 중 어느 한쪽이 승리하는 게 낫다는 차악론이 아니었다. 러시아 노동자들은 차르 전제정에 대항하고, 독일 노동자들은 카이저(독일 황제)에 대항하자는 것이었다.

그로써 “교전 당사국 모두의 노동자들의 연대를 고취해 부르주아지에 맞선 내전을 공동으로 벌이는” 것이다.

레닌은 “합병 없는 평화”가 아니라 오두막을 위한 평화, 왕궁에 대항하는 전쟁! 프롤레타리아와 근로 민중을 위한 평화, 부르주아지에 대항하는 전쟁!”이 구호가 돼야 한다고 했다.

그런 투쟁을 통해서만 제국주의 전쟁을 낳는 진정한 원인인 자본주의 체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와 서방 사이의 제국주의적(제국주의 간) 충돌이다. 5월 21일 '전쟁을 멈춰라! 국제공동행동'

제를 철폐하고 그 체제의 지배자들을 무장 해체시킬 수 있다.

반면, “교전국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모두 자국 정부의 패배를 바라야 한다는 생각을 ‘어처구니없고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 독일사민당의 견해는 “정부들이 시작한 전쟁은 정부들 사이의 전쟁으로 끝나야만” 하지, 계급투쟁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지게 될 터였다.

현실

제국주의 전쟁을 자국 지배자들을 패퇴시키는 계급투쟁으로 전환시킨다는 레닌의 혁명적 패배 전술은 진정으로 혁명적인 반제국주의자들과, ‘사회애국주의자들’, 그리고 말로는 전쟁에 반대한다면서도 실전에서는 자국의 전쟁을 묵인한 평화주의자들 사이에 뚜렷한 선을 그었다.

레닌이 이런 입장을 발표했을 때 이를 지지한 것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하지만 레닌은 이 노선을 제1차세계대전

내내 고수했고, 이것은 러시아 혁명과 독일 혁명으로 현실에서 올바르게 입증됐다.

전쟁 초기에는 자국의 전쟁을 지지하는 애국주의 광풍이 대세인 듯이 보였다(러시아보다는 특히 독일에서). 하지만 전쟁이 지속되면서 그런 분위기는 점점 달라졌다. 전쟁의 참상에 대한 환멸과 분노와 함께, 궁핍·혼란 등 노동계급 생활수준 하락이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1916년 가을이 되면 여러 나라에서 노동계급이 주로 여성들을 중심으로 생계비 위기에 대한 항의를 벌이기 시작했다.

바로 이렇게 노동계급이 러시아와 독일에서 전쟁을 수행하는 자국 정부에 맞서 혁명을 (각각 1917년 말과 1918년 말에) 일으킨 덕분에 제1차세계대전은 종결됐다. 자국 정부의 승리가 ‘차악’이라고 한 사회민주주의자들 때문이 아니라 말이다(그들은 현실의 사태 전개에 무력했다).

물론 지금 벌어지는 제국주의 간 충돌이 제1차세계대전 당시와 똑같은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금 강대국들이 식민지 쟁탈전을 벌이고 있지는 않다(비록 일부 좌파가 우크라이나를 ‘식민지’라고 부정확하게 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갈등은 핵심적 측면에서 제1차세계대전 당시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바로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충돌이라는 점 말이다. 미·중 갈등은 물론이거니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에서도 제국주의 간 충돌이라는 면이 점점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또, 전쟁이 경제 위기와 겹치며 대중의 생활고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따라서 전쟁과 그 원인인 자본주의 체제 반대 투쟁을 연결시킨다는 레닌의 입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레닌이 당시 사회주의자들에게 촉구했던 것처럼, “대중이 이런 [혁명적] 정서를 의식하고 그 의식을 심화하고 분명히 표현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레닌은 말했다. “그런 강력한 혁명 운동이 불타오를 때가 강대국들이 벌이는 제국주의 전쟁의 첫 번째 전쟁 때일지 두 번째 전쟁 때일지, 그 전쟁들의 와중일지 후일지 예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어떤 경우이든지 우리가 짚어진 임무는 이 방향으로 체계적이고 일관되게 활동하는 것이다.”

김준호



서방 제국주의의 무기를 지원받아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군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배신이 초래한)과 대안 부재감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다. 윤석열이 전통적 우파 정당 출신이 아닌 점도 도움이 됐다.

그러나 새 정부의 인사와 정책은 스스로 전통적 우파 정부의 귀환일 뿐임을 드러냈다.

기획재정부와 검찰 등의 관료 출신자들이 우대받고, 군 인사에선 육사 출신 장군들이 중용됐다. 대외 정책은 대북 강경 기조와 한미동맹 강화를 추구한다. 임명하려는 주요 인사마다 부패의 악취가 코를 찌른다.

고물가·고유가로 생계비 위기가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곧 기업"이라며 물가 억제논쟁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했다.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노동자 임금 인상은 억제하라면서 법인세·보유세 인하 등 부자 감세는 신속 추진하겠다고 했다. 여론이 싸늘하게 식을 수밖에 없다.

여권 내분이니 뭐니 하는 것은 지지율 하락 요인들 가운데 완전히 부차적인 것들이다.

노동운동은 생계비 위기와 구체적인 불만들을 결합시켜 대중을 동원해야 윤석열의 위기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 두 달 만에 데드크로스 - 노동운동은 생계비 위기와 구체적 불만을 결합시켜야 한다

문경원 기자

난제

윤석열은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해 중국·러시아를 견제·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동맹에 함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실 경제수석 최상목은 이런 행보를 뒷받침하며 한국 경제의 탈중국화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중국 경제의 성장 둔화가 예상되는데도 너무 높은 중국 의존도는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은 이번에 유럽을 대상으로 '세일즈 외교'(원전·방산 등 시장 진출 협상)를 벌인 것을 성과로 부각시켰다. 탈중국화(수출 다변화)의 대안이 유럽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몇십 년 전에는 미·일 비중이 너무 커서 수출 시장 다변화를 추구했다. 그 주요 대상은 바로 중국이었다. 당시 국제 정세는 중국과의 경제적 통합을 늘리는 것이 미·일 경제와의 갈등이나 관계 축소를 뜻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올 상반기 한국 경제는 역대 최대 무역 적자를 기록했는데, 중국과의 무역도 28년 만에 적자가 났다. 사실 무역 적자는 에너지·식량 등 수입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인데, 중요한 것은 중국과의 교역(특히 수출) 축소가 전체 실적에 타격을 줬다는 점이다.

한미동맹 강화와 탈중국화를 지지하는 보수 언론들도 기존의 경제 협력은 유지되도록 중국을 상대로 외교를 잘 해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한다!

미국이 바라는 한일관계 개선도 쉽지 않다. 일본 정부의 고압적 태도로 보건대, 윤석열이 국내 여론을 설득시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고환율과 고물가를 막겠다며 기준 금리를 대폭 인상했는데, 대출금리 인상으로 서민층 불만만 커지고, 막상 환율과 물가 상승은 막지 못했다.

그러자 시중은행들의 대출 금리 인상을 제한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처럼 윤석열 정부가 혼란을 겪는 동안 대중의 불만은 점점 커지고 있다.

딜레마

임금 체계 개편과 노동시간 유연화 등 노동조건 개악으로 전체적인 임금 비용을 낮추려는 윤석열 정부에게 고물가와 점증하는 불만은 골칫거리다. 기업주들에게도 임금 억제는 이윤 보호를 위해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가 공세를 시작하

기도 전에 지지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반면, 노동조합 운동의 주력 부대들은 최근 별 패배 없이 노동조건을 지켜왔다.

6년 전에는 박근혜 정부가 임금 체계 개편 등을 포함한 노동개악 공세를 퍼다가 무너졌다.

노동부 장관이 발표한 노동개악 방안을 다음 날 윤석열이 미정이라며 부인한 해프닝이 벌어진 이유다.

윤석열 정부로서는 노동 개악을 추진하면서도 정면 대결 방식보다는 저항이 조직 노동계급 전반으로 보편화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더 중점을 둘 것이다.

이런 조심성은 단체협약으로 개악을 피해 갈 수 있다고 보는 대사업장 노조 지도자들이 노동 개악 저지 투쟁의 정치화에 소극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수 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경찰과 국정원 등을 정비하며 탄압의 칼날을 준비하고 있다. 그런 탄압이 운동 전반을 위축시키지는 못하겠지만, 단결과 연대의 확대에는 방해가 될 수 있다. 대개 탄압은 선별적이며 본질적으로 이간질을 통한 각개격파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기의 폭과 깊이 때문에 노동자 투쟁은 보편화·정치화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잘 조직된 노동자들의 투쟁과 (주로 청년인) 미조직 노동계급 대중의 불만이 만나야 하는 것이다.

김문성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7월 14일(목) 오후 8시 **발제 강동훈** <노동자연대> 기자

참가신청 bit.ly/0714meeting

토론회 당일 오후 7시 30분에 유튜브 접속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 02-2271-2395, 010-4909-2026 (문자 가능)

☎ 카카오톡 1:1 오픈채팅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